■ 광주 도심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 사고

5·18 행사기간 중 폭삭 '하마터면…'

토사 점포·주차장에 쏟아져 대피소동
주차 차량 50여대 발묶이고 통행 제한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에서 일어난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로 인해 금남지하상가 일부 점포와 지하주차장의 영업이 향후 상당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또 추가 붕괴 가능성도 높아 지반 침하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과 보수공사가 이뤄질 때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조성 등 전당 설립 일정도 일부 연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말까지 금남로 일대에서 계속될 예정이었던 5·18 30주년 기념행사도 연기나 장소 이전 등이 검토되고 있다.

◇피해규모＝금남지하주차장 위 지반이 무너져내리면서 지름 5m 높이 5m 무게 수 t에 달하는 냉각탑이 기울고 주변 토사가 그대로 지하주차장과 사고 지점 아래에 있던 지하상가 내 옷 수선가게와 사진관 등 3곳의 점포로 쏟아졌다. 당시 주차장에서 근무하던 직원 4명은 곧바로 대피했으며, 토사와 시멘트 더미가 쏟아진 점포는 사고 전날 주차장 D건설의 권고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특히 사고가 난 금남지하상가는 쇼핑몰과 극장이 밀집된 충장로와 연결돼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 행사가 매일 열리고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원인＝냉각탑 아래에는 바로 금남지하주차장 입구로 애초 지반이 취약한 곳이다. 그 주변에서 4층 높이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차장 설립공사가 진행중이었으며,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로 수십t에 달하는 무대 및 음향장치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지반이 약해진 것이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시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와는 관련이 없다며 지반이 붕괴된 것이라면 천장이 아닌 지하상가 바닥부터 붕괴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냉각탑도 45도로 기울어진 것이 이를 반증한다"라고 말했다.

또 사고가 발생한 곳은 최근 들어 비가 새는 등 붕괴 가능성이 있어 상인들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D건설업체와 감독 기관인 동구청이 대응을 소홀히 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하상가에서 의류점포를 운영중인 정모(60)씨는 "올 들어서 천장에서 돌이 떨어지고 물이 새는 등 이번 사고는 이미 예측이 됐다"며 "사고 당일 오전에도 업체 관계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사고가 일어났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사고 원인에 따라 피해 점포 및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영업피해 보상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남지하상가＝금남지하상가는 1988년 1월11일 착공됐다. 광주 도심에 지하상권을 조성하면서 금남로에 쏠린 교통하중을 줄여보자는 것이 사업의 주된 취지였다. 쾌적한 지하보도를 제공하고 유사시에 대피소 활용한다는 복안도 있었다. 시공을 맡은 금광기업은 20년 무료사용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공사비 전액인 349억2000만원을 투입했다. 모두 2만5700㎡의 지하공간에 380여개의 점포와 보도·지하주차장을 설치했다. 1공구는 지난 1989년, 2공구는 1991년 각각 준공돼 일반에게 분양됐으며, 당시 분양가격은 한 칸(14.87㎡) 당 장소별로 5000만~6000만원이었다. 문제가 된 냉각탑은 1991년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천장 '와르르'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금남지하상가 천장이 무너져내려 점포 3곳을 덮쳐 상인과 시민들이 긴급대피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양주 한잔에 37만원 '폭탄'

광주선관위, 구청장 후보와 식사 9명에 과태료

'양주 한잔에 37만원?'

광주의 한 구청장 후보와 식사를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잔 추산가 37만원에 이르는 양주를 마시고,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선거구민 친목모임에 참석해 면세점 가격 34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700㎖) 양주를 제공한 북구청장 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풍향동 모 음식점에서 9명으로 구성된 한 친목모임에 참석해 면세가 34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한 혐의다. 식사비는 후보가 아닌 제3자가 계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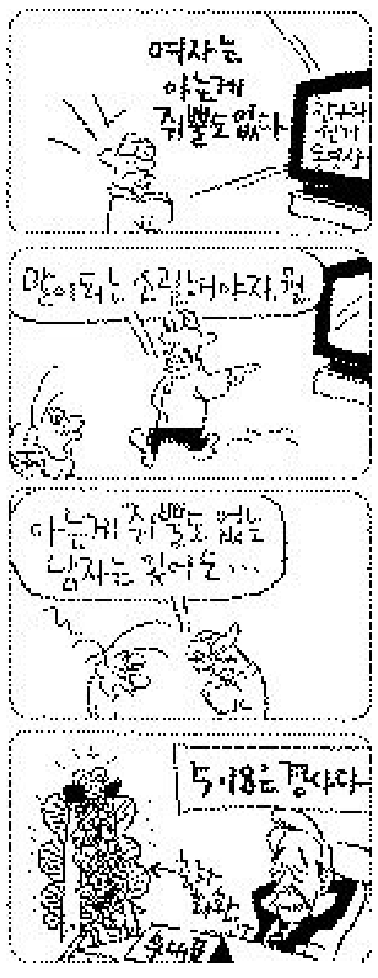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관련법에 따라 30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공된 양주가 면세점에서 구입된 점을 고려, 물품가액 34만원에 30배를 계산한 총 1020만원을 9명에게 나눠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인당 113만3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술의 양으로 따졌을 때 9명이 평균 세 잔 정도의 양주를 마신 것으로 간주하면 한 잔의 가격은 37만7000원 꼴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선거철에 정말 비싼 양주를 마신 셈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8025〉 김종두



유흥업주 뇌물 받은 경찰 실형

광주지법 10단독 장용기 판사는 19일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이모(47)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090만원을 추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암군 발주공사에 '뒷돈'

공무원 등 2명 구속·8명 입건

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주고 받은 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경제범죄팀은 19일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수억원대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챈 영암군 공무원 신모(52·5급)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6~8급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한 전기공사업자 이모(49)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업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영암군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2005~2008년 사이 이씨로부터 1520만원을 받는 등 업자와 민원인 등 5명으로부터 40차례에 걸쳐 639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또 2005년 12월께 한국도로공사 토지보상 담당 직원과 공모해 본인 소유의 땅 2필지(731㎡, 1208㎡)를 보상토지로 불법 편입시키는 수법으로 3억5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업자 이씨는 신씨에게 '뒷돈'을 건넨 뒤 2006년, 2007년 가로등 유지보수비와 신규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영암군으로부터 923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08년 10월께 650만원 규모의 삼호읍사무소 창고 증축 공사를 1115만원 규모의 공사인 것 처럼 설계도와 계약서를 꾸며 사업비를 타낸 뒤 이 중 450만원을 공무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성 미끼' 소녀들에 사기 당한 30대

쌍나팔

○…"내 친구와 성관계를 맺도록 해주겠다"며 먼저 접근한 10대 소녀들의 말에 속아 돈을 준 30대와 돈을 챙겨 달아난 10대 소녀들이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오모(33·무직)씨는 지난 5일 밤 11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초등학교 앞에서 문모(16)양 등 2명으로부터 "12만원을 주면 내 친구와 성관계를 맺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가출한 이모(16)양을 만났다는 것.

○…오씨는 이양을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갔으나 완강한 거부로 성관계를 맺지 못했고, 12만원을 소개비로 받은 문양 등은 곧바로 잠적.

○…오씨와 친구를 소개한 문양 등 10대 소녀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됐으며, 오씨는 "처음 만난 문양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며 횡설수설. /김호기자 kimho@

신안군수 후보 측근 수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정성윤)은 19일 신안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근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역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인사는 지난 선거 뒤에 말썽을 일으켜 최근 연락이 없었으며, 이번 선거 캠프에 합류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잇단 괴한 침입…여대생 기숙사 '불안'

영암경찰, 40대 영장 … 성범죄 우려도

영암경찰은 19일 여대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윤모(42)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50분께 전남 모 대학 여학생 기숙사 1층 장모(여·22)씨의 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가 침입한 기숙사는 2층 건물로, 여학생 20여명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1층 현관 입구 등에 3대의 CC(폐쇄회로)-TV만 설치돼 있을 뿐 경비원이나 경비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건물은 '화재시 대피'를 이유로 야간에도 현관 출입문을 개방하고 있어 절도나 성범죄 등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에는 광주 모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20대 괴한이 침입해 4층과 5층 등 2곳을 털었다. 박씨는 당시 기숙사에 설치된 길이 80㎝의 추락방지용 철제 난간 새시를 붙잡고 1층에서 5층까지 올라갔다. 지문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도어록, CC-TV 등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

대학생 딸을 둔 이모(52·광주시 동구 지산동)씨는 "딸이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혹시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 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